

韓-UAE 공동선언문 채택

‘바라카 원전’ 글로벌 공동진출 협력

‘100년 동행 위한 새로운 도약’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원전·방산 등 8개 분야 협력
바라카 원전 노동자 만남도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 경제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국방·방산·원전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18일 오전 아부다비에 있는 UAE 대통령궁인 ‘카사르 알 와탄’에서 만났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전 11시14분(한국시간 오후 4시14분)부터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단독회담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두 정상은 오찬을 함께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정상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제, 투자, 국방, 방산, 원자력, AI, 보건, 의료, 문화 등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밤 발표된 공동선언문을 보면 양 정상은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가 강화됐다는 데 공감하고,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이며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국방 및 방산기술, 인공지능(AI)·양자 등 첨단·신흥기술, 원자력, 공중보건 및 의료, 식량안보, 문화교류 등 상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호 전략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UAE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방산이었다면서 “지금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양국 간 협력의 니즈(요구)는 서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R&D) 플랫폼 구축, 기술·인력 교류 및 지식 이전 확대,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공동 생산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모델 구상 등을 추진한다.

선언문에는 원전, AI 및 반도체, 국방·방산 등 8개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담겼다.

우선 원전 산업에서는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의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상호 이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인공지능(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인력 양성 등에도 힘을 모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오찬장

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UAE 측의 제안으로 바라카 원전의 한국·아랍에미리트 측 노동자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AI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의 협력 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 및 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AI와 에너지, 방산 등 3대 분야를 통합 연계한 대형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UAE 환자 대상 지역 의료지원센터(PPCC) 설립을 추진하고,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UAE 내에 K 컬처, K 푸드 등 한류와 미래산업을 하나로 묶는 복합클러스터 개념의 ‘K-시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기업 발목 잡는 족쇄 풀어드리는 데 최선”

장동혁, 최태원 만나 규제해소 의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기업들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성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남은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을 찾아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상의 관계자들과 기업 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 회장은 “먼저, 우리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과거 고성장이 만들어진, 성장할수록 규제가 계단식으로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현재의 시스템을 이제 성장 중심으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갖춰주길 바란다. 사이스별 규제보단 성장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스스로 기회를 찾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원활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있었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조단위 달러를 투자하는 것도 기업들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의 자금을 들여와서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한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입법 지원도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상법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AI와 첨단산업 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최태원(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원 법안, 상속세법을 중점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최 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는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싸우고 있는가’가 머리에 남아 있다”며 “성장 중심을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에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또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대한상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343개의 치등 규제가 존재한다”고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아난다.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노동시장이 살아야, 청년들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며 “결국,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전동킥보드 등 안전 우려… PM법 제정 논의

국토교통위원회, 오늘 당정협의

시민의 근거리 이동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라스트마일(도착지까지 남은 최종 구간)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 사고와 무단 방치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운데, 당정이 20일 만나 PM법 제정 추진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민주당 국토위 위원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기조실장, 국토도시실장, 건축정책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등 이 참여하는 당정협의가 열린다고 19일 공지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관련 산업 발전과 이동성 제고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높고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3년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238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4명이 사망하고 262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은 15만건을 넘었고,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행·음주운전·승차정원 위반 순으로 위반 사례가 많았다.

이에 여야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지자체 안전관리 책무 강화 ▲무면허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사업자 등록제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주차·충전·수리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거치대 설치 등이 담겼다. 이미 지난 9월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마쳤다.

민주당 국토위는 PM법 제정 논의 외에도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1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 우려가 있는 위반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시민의 주거 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태홍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구 발전 동반자 되겠다”

민주당 대구시당 최고위원회의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소개
숙원사업 ‘대구·경북 신공항’ 지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19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지역 발전과 기업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내는 등 민심에 한발 더 다가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부터 살리겠다. 대구부터 회복시키겠다.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려겠다”면서 “민주당은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되겠다. 민주당은 대구 회복 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TK(대구·경북)에 지원을 약속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TK에서는 민주당이 33.4%, 국민의힘 57.2%로 나타나 견고한 야당 지지세를 나타냈다. TK는 권역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민주당을 이긴 곳이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를 활용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1%p(포인트), 신뢰수준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정 대표는 정부가 대구를 국내 최초 AI(인공지능)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하고 5510억원 규모의 지역 거점 AX(인공지능 대전환) 혁신 기술 개발 산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것을 소개하면서 지역의 숙원 중 하나인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AI 로봇문화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달성국가산단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이 전통적 제조

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또 고도화하고 IT 전문인력 유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경북 신공항 산업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산업이지만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표류되어 왔다”며 “대구가 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예 산 등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긍정적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 역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후 대구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인 ‘비전AI’ 솔루션 전문기업 스피어AX를 찾아 융복합관제센터 등을 둘러보고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정당의 역할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피어AX는 수술실CCTV 등 AI영상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AI종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